

밝고 건전한 e세상을 꿈꾸며

글 / 정도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

21세기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일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사정은 급격히 달라졌다. 역사적으로 볼 때 농경시대, 산업시대에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선진모습들이 여러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및 전자정부 구현 세계 1위, 이용자 수 세계 2위, IT 분야 경제성장은 OECD 선진국 중 7위를 차지하면서 인터넷 초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IT 분야가 무역수지 흑자의 61.7%를 점유한다는 사실은 정보화시대에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정보 사회, e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e세상에서는 각종 온라인 콘텐츠, 즉 온라인 영상·게임·교육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계 각층에서는 인터넷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매체라고 인정해 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유네스코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도 인터넷의 장점이 확인되자 많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의 역기능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이 보여주는 힘은 가히 혁명적이다. 이는 세계적 IT강국인 한국인의 일상 가운데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는 ‘소수가 독점해 온 정보’가 ‘함께 나누는 정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체험했다. 정보민주주의의 발전이었다. 이와 더불어 지금껏 문화의 소비자로서 인식돼 온 대중은 문화의 생산자로서 전면에서 등장했고, 이들은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론주도층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그렇듯, 인터넷 역시 밝은 면 뒤에 어두운 면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10만개가 넘는 음란 사이트, 하루 수십통씩 날아오는 음란 스팸메일, 대화방에서의 청소년들의 성매매 행위, 자살사이트 접속 후의 자살결행, 음란광고나 음란영상을 선전하는 팝업창 등이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행해지는 사이버 테러는 사회적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음습하고 어두운 가학적 음지문화가 인터넷의 황폐화와 사이버 공간의 슬럼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터넷의 이러한 각종 부작용은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다. 영국의

미성년자가 채팅을 통해 미국 군인을 알게 돼 가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사이버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휩싸이기까지 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한 신고센터인 사이버 톱라인(Cyber tipline)에는 아동포르노와 관련해 일주일 동안 대략 2,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물질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신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지 않고는 IT산업 자체의 발전이 더이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역기능만 초래될 뿐이다. 고속통신망의 확장만으로 IT 강국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의 IT산업을 이끄는 IT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e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공공정보의 전자적 공개의 확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는 한편, 정보기술에 의한 사회적 통제를 지양하고 자유의 영역을 신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또 사회 구성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실명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이끌기 위해 세대간·집단간 소통을 저해하는 사이버 언어의 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밝고 건전한 초일류 IT 선진국을 꿈꾸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 또한 인터넷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먼저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인 '인터넷 119'를 운영,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정보이용자들이 인터넷 정보를 자발적으로 선별, 차단할 수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한글 제공 불법음란사이트의 근절 및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자와 협력해 국제관문에서의 자율 차단을 유도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또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 지난해 5월 국제 핫라인인 INHOPE(The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에 가입해 아동포르노 등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사이버세상'이라는 명제아래 범국민 참여 'e-Clean Korea'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종 유해정보는 여전히 온라인 세계를 더럽히고 있다. 정부기관의 규제만으로 밝고 건전한 e세상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각성과 주체적 실천의지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네티즌 또한 사이버 공간의 주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체득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주인인 네티즌과 기업, 언론,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정부의 지원도 무의미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공권력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반시민과 사회단체, 네티즌과 관련 사업자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을 제거하고 사이버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건전한 e세상 구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꾸준히, 심도 있게 이뤄져야만 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과 산업 중심의 IT 강국만이 아니라, 총체적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건전한 IT 강국으로서도 위상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다. 산업과 문화 양측에서 IT 세계 초일류 선진국가 건설을 꿈꾸며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 